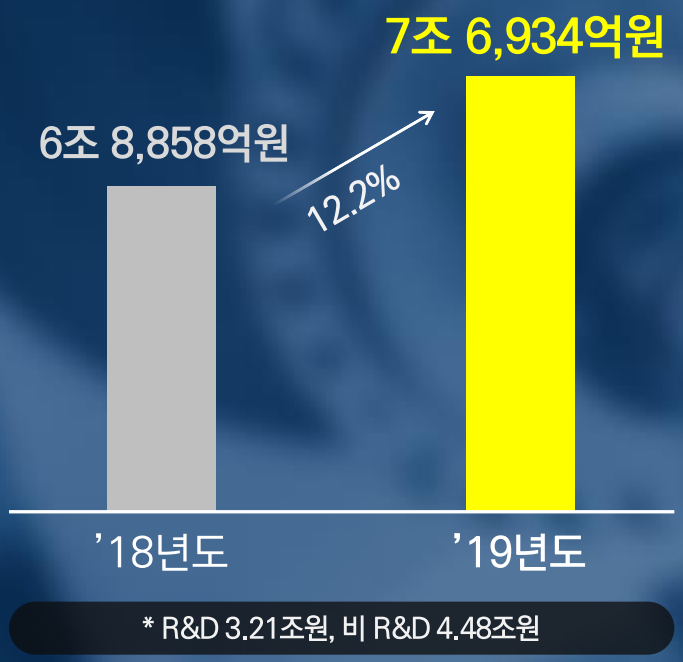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부는 우리 제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합니다.



* R&D 3.21조원, 비 R&D 4.48조원

對국민 지원 확대 분야

1. 주력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2. 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4.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5.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6.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합니다.
7. 에너지 복지와 안전 지원을 확대합니다.
8. 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1 주력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주력제조업의 생태계 강화 (1,196억원)

▶ 중소 /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 맞춤형 지원
- 전북(상용차), 전남(F1서킷), 울산(안전시험장), 경남지역(샤시업체 미래차 전환) 인프라와 연계 지원

▶ 조선 기자재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중소형선박기자재 육성, 기자재 수출 확대 및 국제인증 지원

친환경·스마트 산업 전환 (2,516억원)

▶ 스마트홈 기술과 서비스 투자 대폭 확대
-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서비스 등 보급모델 개발 추진
- IoT가전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 차세대 수송기기 지원 강화
-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 대형버스 자율주행 부품개발
- 친환경 수소 연료선박 플랫폼

글로벌 수준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고도화 (9,315억원)

▶ 업종별 신소재 부품 투자 확충
- 기능성 섬유 및 세라믹
- 고부가 철강·화학 소재

▶ 스마트 기계 / 장비 중점개발
- 스마트 생산로봇 기술개발
- ICT 기반의 맞춤형 의류생산 시스템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투자 (879억원)

▶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추진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Post-OLED 등)
* 총 사업규모 : '19-25년, 5,281억원 ('19년: 70억)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2 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생태계 완성,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 항공산업 도전
➡ 청년층에게 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 부여

1 수소경제 활성화 (390억)
-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 수소자율버스시범운행지원
- 수소융복합단지실증
- 수소생산기지 구축 (3개소)



2 에너지신산업 (3,677억)
-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시티용 에너지솔루션
- 고효율바이오발전시스템
- 미세먼지저감친환경설비혁신
- 지능형 LVDC 기술개발



3 항공우주 (1,179억)
- 항공 공정기술개발
- 항공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
- 드론활용서비스시장창출



4 바이오 (2,217억)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 구축
-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 고도화
- 3D프린팅 의료기기산업 실증
-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플랫폼
-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구축



미래 세대 위한 고난도 프로젝트 추진 (Alchemist, 알키미스트)

▶ 매년 산업 R&D의 일정부분 (약 100억원 규모)을 미래세대 위한 대도전과제(Grand Challenge)에 투자

공고일정 19년 1/4분기 이내

진행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 및 선정 ➡ 신규과제 확정 ➡ 협약체결

문의 에너지신산업과 (044-203-5398), 자동차항공과 (4322), 바이오나노과 (4398)

지원대상 : 청년구직자, 대학/대학원

3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년 양성을 위해 해외기관 공동연구 지원사업 신설 (70억원)

▶ 혁신성장 분야 100명, 에너지신산업 분야 40명 지원
-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선박, 로봇, 3D프린팅, 지능형반도체, 스마트공장, 엔지니어링 등
-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프로슈머, 청정화력, 에너지 안전·보안

▶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1년 이내 공동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인건비 / 체재비 48백만원 이내, 연구활동비 48백만원, 간접비 4백만원 이내

→ (19.5월) 해외연수생 모집공고 (19.6월) 평가 및 선정 (19.7월) 해외연구·연수시작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주력, 미래신산업 핵심인력 양성 확대 (851억원)

▶ '19년은 5개 과정을 추가 신설한 30개 과정에 지원
- 레이저·광학, 반도체소재부품장비, 기능성코팅융복합, 인공지능, 뿌리스마트융합



공고일정 각 과정별로 지원대학 선정절차, 일정 별도 공고

진행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 및 선정 → 신규과제 확정 → 협약체결

지원대상 : 입주기업, 청년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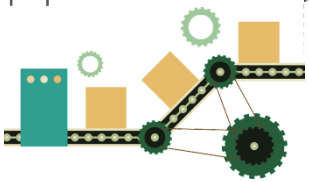
4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4,375억원)

1 산업단지 제조 혁신

- 산단 맞춤형 스마트공장 확산
  - 중소기업 집적형 / 대중소상생형
- 산업 데이터 연결, 공유, 활용
  -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2 근로자친화공간 조성

- 스마트 ICT 기술기반 인프라 구축
  - 지능형 교차로, 주차장
  - 환경 / 안전 관제센터
- 기숙사, 행복주택, 복합문화센터



3 창업, 신산업 육성

- 신산업 창출환경 조성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스마트창업센터 조성
  - 네거티브존 시범 도입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인프라조성
- 수소자율주행 셔틀버스, 협업로봇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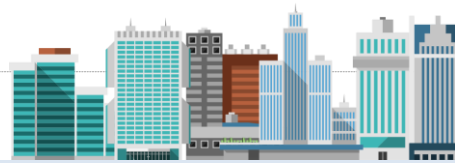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944억원)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재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대중교통 및 주유비로 사용 가능한 카드 발급 지원

공고일정 매 분기 사업자 선정 공고

진행절차 사업신청 접수 → 평가 → 선정 (분기별 공모)



문의 입지총괄과 (044-203-4456)

지원대상 : **지역기업, 혁신기관, 퇴직인력**

5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본격 육성 (509억원)

▶ 지역 기업,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非수도권 14개 시도별 신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 혁신프로젝트, 혁신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연계 협력, 사업화 지원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 국내복귀 투자 기업 보조금 확대 (1,511억원)

▶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설비투자비용의 최대 24% (토지매입비는 40%)까지 보조금 지원

- 토지매입비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에만 지원
- 산업위기지역 투자시 설비투자비용의 최대 34%, 토지매입비는 최대 50%까지 지원

지역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에 대한 보조사업 신설 (70억원)

▶ 상생형 투자기업은 업력요건 완화,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최대 100억원 지원 추진 (先지급 7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고시)개정 : '19년 상반기

구조조정업종 퇴직인력 재취업,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의 활력회복을 지원 (677억원)



지원대상 : 국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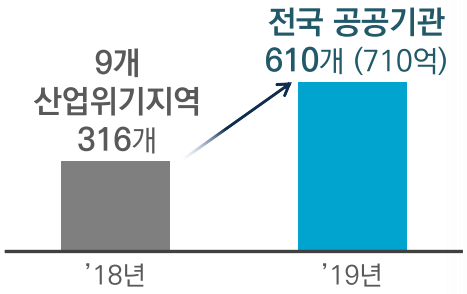
6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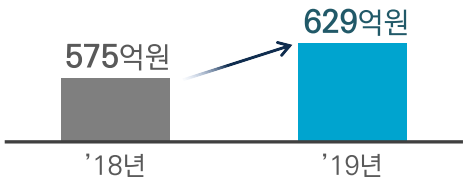
[공공기관 보급 본격화]

전국의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과
세종청사에 태양광 보급사업 본격 시행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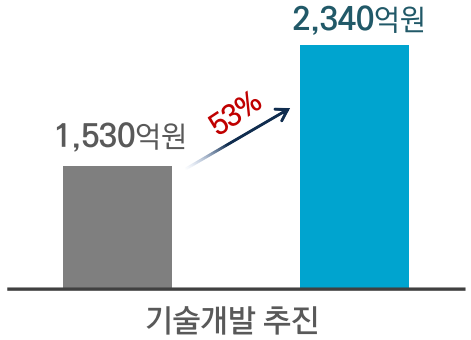
지역문화와 연계한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지자체 주도의 보급사업 확대



* 설치개소: ('18) 8,500 → ('19) 12,000개소

신재생에너지 금융
(주민참여형 태양광 융자지원 확대)

농, 축,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용량별 융자비율 상향 조정 예정 (최대 90%)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공고 (3월) → 신청서접수 → 사업평가 및 선정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태양광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비태양광 숲 국민

사업공고 (1월) → 신청서접수 → 심사 → 추천 → 대출

지원대상 : **저소득층, 노후아파트, 농어촌마을**

7 에너지 복지와 안전 지원을 확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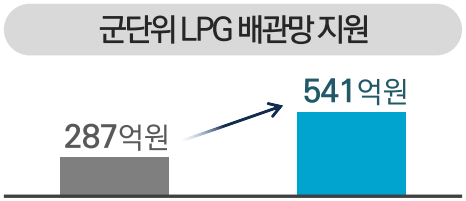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우리 주변의 이웃이 없도록 적극 지원 (2,18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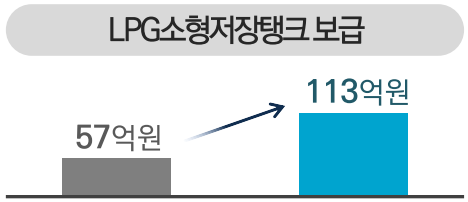
▶ **폭염 대비 위한 지원사업 신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40억원)
- 냉방기기 지원예산 (60억원)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값싸고 안전한 가스 연료 공급지원**





국민의 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1,278억원)

▶ **노후화된 아파트 변압기 교체비용 지원 신설** (56억)

* 15년 이상 경과한 930여개 단지

▶ **서민층 가구 LPG시설 개선** (199억)

*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
* 4.8만→10만가구로 확대

▶ **가스안전 검사·교육·홍보 등 안전관리 지원** (1,851억원)



8 수출 확대와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2년 연속 수출 6,000억불 달성 위한 지원 확대 (4,482억원)

▶ **수출지원기반활용 (564억)**
*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
*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 **무역보험기금 출연 (350억)**
*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 선박신조 / 선박 R/G 발급 지원

▶ **지역전문가 양성 (31억)**
* 무역전문인력 800명 (대학생)
* FTA실무인력 100명 양성 (특성화고)



신흥시장 개척 및 통상분쟁 대응 강화 (691억)

▶ **산업통상, 에너지 공적 개발원조 확대 (384억)**
* 19년은 미얀마 에너지자립형 마을 구축,우즈벡 전자무역 시스템 등 6개 신규 추진

▶ **통상협정 국내대책 지원 (123억)**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 FTA 국내대책 지원

▶ **수입규제 대응 지원 (22억)**
* 중소기업의 대응 컨설팅 지원
* 규제대응 네트워크 구축



5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 억불 초과 달성 위한 지원 확대 (871억)

▶ **외투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토지를 제공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 **신성장동력산업, 고용창출 외투기업 현금지원을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
*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산업, 부품소재, 대규모 고용창출사업, R&D 연구시설, 글로벌지역본부
* 지원용도 : 토지·건물 매입비, 임대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문의 무역정책과 (044-203-4027), 신북방통상총괄과 (5687), 투자유치과 (4081)

산업부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

1. 규제 샌드박스로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첨단업종 범위를 개편하여 입지를 지원하겠습니다.
3. 누구나 자본금 없이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4. 수소차 충전소의 운영기준을 완화하여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 LPG 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폐지하되, 필요한 에너지 안전의무는 강화하겠습니다.
6.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1 규제 샌드박스로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규제 샌드박스란?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주요내용)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3대 제도로 구성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1 규제 신속확인

-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 → 허가 필요성 여부와 기준· 요건 등을 신속히 확인
- 사업자 신청 ➡ 산업부 접수 ·통보
  - ➡ 관계부처는 30일 내 회신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 →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면제
- 기간 : 최대 2년 (1회 연장 가능)

3 임시허가 제도

-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 →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
- 기간 : 최대 2년 (1회 연장 가능)
  -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임시허가기간 연장

* 시행일 2019년 1월 17일



(활용 가능사례) 도심 지역 내 수소충전소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 (현행)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규제 샌드박스 적용) 상업지역 내 설치를 임시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규제 개선 추진

문의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2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첨단업종 범위를 개편하여 입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개념) 첨단업종 제도란?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의 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①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은 제한되나, 첨단업종일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허용

② 「국토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제한되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중설 규제완화]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기업	• 1천㎡이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 첨단업종 기존공장 증설	• 기존공장 증설	• 1천㎡이내 공장 신·증설 • 기존공장 1천㎡이내 증설
중소기업	• 도시형공장 신·증설 • 기존공장 증설	• 공장 신·증설	

▶ 첨단업종 해당 사업자가 지방에 공장 신·증설 투자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하여 첨단업종 범위 개편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개정)

▶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등 첨단성이 높은 16개 업종 신규 선정

* 내연기관 등 기술발전에 따라 첨단성이 약화된 27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2018년 12월 18일

3 누구나 자본금 없이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란?

▶ ①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②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

(주요내용) '신 비즈니스'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신설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전기사업의 진입장벽 대폭 완화

1 (기존 전기사업자) 허가제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등록제

2 등록 요건

▶ 별도 자본금 및 시설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 확보로 등록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단, 전기분야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3 등록 및 중개사업절차

등록증 발급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 ➡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
중개사업절차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 ➡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 체결

*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효과) 소규모 발전사업자(1MW 이하)*도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쉽게 참여
* 태양광 33,295개, ESS 103개, 전기차 40,113대('18.7월)

문의 전력진흥과 (044-203-5270)

4 수소차 충전소의 운영기준을 완화하여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충전압력·내부용적 제한으로 1회 수소 운송 가능량에 한계

▶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수소차 충전소 사업성 저하

(개선) 수소 운반시 안전성이 검증된 대용량 수소운반 용기 사용 허용

▶ 충전압력(35→45㎫)과 내부용적(150→450L) 기준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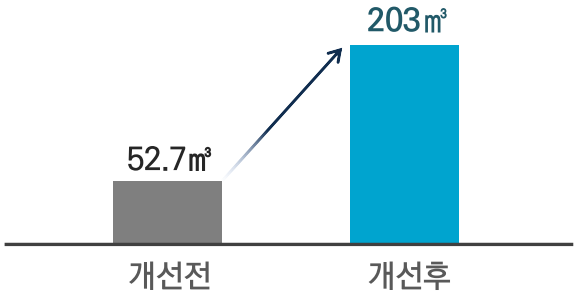
* 시행일 2019년 3월

(효과) 1회 운송 가능한 압축 수소 물량 약 3.8배 증대 ➡ 물류비 부담 완화



튜브 트레일러

[대용량 수소운반 용기(튜브 트레일러) 1개 운송량]



문의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5 LPG 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폐지하되, 필요한 에너지 안전의무는 강화하겠습니다.



LPG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 (기존) LPG 자동차 운전(대여 포함)시 안전교육 의무 이수(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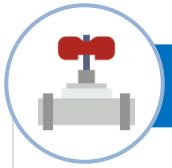
* 교육 미이수시 20만원 과태료 부담

▶ (개선) 안전교육제도 폐지*, 보완대책으로 운전면허시험에 LPG 자동차 안전수칙 반영

* 폐지사유 : ① LPG차량 안전성 향상 (연 1건 단순 누출사고)
② 지자체 단속실적 전무 등 법집행 실효성이 없음



* 시행일 2018년 12월 11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시설에 대한 고압가스 공급자의 검사의무 강화

▶ (기존) 고압가스 공급자의 검사의무를 판매자에게만 부과하고 별도 제재규정 부재

* 사고건수: '13~'17년 고압가스 사고 75건 중 특정고압가스 관련 사고 54건(72%)

▶ (개선) 의무대상을 제조자까지 확대하고 별도 제재규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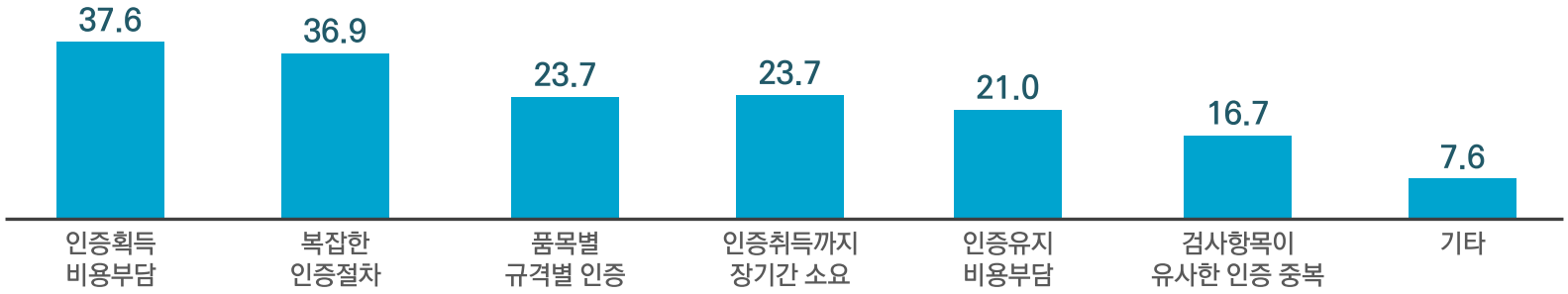
구분	기 존	개 선
의무대상	판매자	판매자, **제조자**
의무행위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여부 확인 • 완성검사·정기검사 실시여부 확인 • 부적합 시설에 공급중지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여부 확인 • 완성검사·정기검사 실시여부 확인 • 부적합 시설에 공급중지 **후 신고**
제재규정	-	•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행일 2019년 6월 12일 (공포일 2018년 12월 11일)

6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인증제도 유사·중복과 이로 인한 비용 과다 등으로 산업계 부담

[중소기업 인증 취득의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중소기업 옴부즈만, '15년)



(개선) 각종 인증제도를 주기적(3년)으로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점검절차 : (각 부처)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검토서를 심의, 개선 필요시 부처 통보

➡(각 부처) 필요 조치 시행



*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효과) 유사·중복 인증 제도의 주기적 점검, 통합, 폐지 ➡ 기업부담 완화

▶ 개선사례 : (종전) 축산물 HACCP 및 식품 HACCP 중복 인증

➡ (개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 통합하여 기업불편 해소 및 수수료 부담 완화 ('16년)

문의 기술규제조정과 (043-870-5554)